



# 기독일보



2021년 7월 22일 목요일 (음력 6월 13일)

www.christiandaily.co.kr

구독신청 02-6085-8166 제 1846호

## “건가법 개정안, 동성혼 합법화 출발점”

동반연·건반넷,  
21일 긴급 기자회견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동반연)과 건강가정기본법개정안반대전국단체네트워크(건반넷)가 21일 서울역 회의실에서 '건강가정기본법(건가법) 개정안 반대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다. 특히 이날 동반연 운영위원장인 길원평 교수가 삭발식을 가졌다.

길 교수는 “건가법 개정안이 자칫하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그에 따르면 이 법안은 최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여가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다뤄져 거의 통과될 뻔했다. 이에 길 교수는 8월에 다시 논의되기 전에 분명한 반대 의사를 밝혀야겠다는 생각에서 이날 기자회견과 삭발식을 갖게 됐다고.

그는 “사실 개정안 내용을 정확히 알면 아무도 찬성할 사람은 없을 것”이라며 “건가법 개정안이 겉으로는 다양한 가족이라든지 이런 걸 평계로 대지만 실상은 동성결혼을 합법화하기 위한 출발점”이라며 “가족의 정의를 없앤다든지… 이성뿐 아니라 동성 간 비혼동거도 허용되는 그런 결과를 낼 것”이라고 했다.

길 교수는 “동성결혼을 지지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남자 며느리와 여자 사위를 얻는 걸 좋다고 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며 “그런데 이 건가법 개정안이 그런 범인 줄 모르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법안의 심각성과 긴박성을 알리고자 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지난해 9월 1일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같은 당의 정춘숙 의원



“건가법 반대한다” 길원평 교수가 21일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반대 긴급 기자회견에서 삭발을 했다. 길 교수는 삭발을 통해서라도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사를 알리고자 한다고 했다. 이후 기자회견 주요 참석자들이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반대 피켓을 들어보이며 강력한 반대의지를 표명했다. ©CHTV 김상고 PD

도 지난해 11월 2일 동명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은 남 의원안에, 남 의원은 정 의원안에 공동발의자로 참여하기로 했다.

두 법안 모두 ‘가족’이라는 용어를 정의한 현행법 제3조 제1항 “가족이라 함은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를 말한다”를 삭제했다. 또 제2조에 “누구든지 가족의 형태를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삽입했다. 이 때문에 이 법안에 대해 “동성 커플도 가능하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족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조우경 대표

(다음세대를 위한 학부모연합)는 이 같은 법안 내용에 대해 “비혼 출산 가구, 사실 혼을 포함한 동거, 더 나아가 동성결합 및 동성혼인도 가족의 한 형태이므로 차별받지 않는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는 것”이라며 “그리고 그 정의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차별적 행위가 된다는 해석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결국 다양한 가족의 형태에 대한 차별금지법과 다를 바 없는 동성혼 합법화 추진 법안으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했다.

아울러 조 대표는 “가정은 가족 모두

를 성장시키는 작은 사회, 작은 나라”라며 “부디 건강한 남자와 여자, 건강한 가정으로 자라나고 지켜질 수 있도록, 가족의 아름다운 질서와 그 의미가 변질되지 않도록 건가법 개정안을 철회해 달라”고 촉구했다.

김진영 기자

## 송영길·이준석, ‘전국민 재난지원금’ 재확인… “소상공인 먼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21일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이 필요하다는 합의를 재확인했다.

송 대표와 이 대표는 이날 오후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서 진행된 당 대표 토론에서 이 같은 뜻을 밝히며 다만 지금 시기는 코로나19 4차 대유행을 고려해 조정해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앞서 두 대표는 지난 12일 만찬 회동을 통해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합의했지만 국민의힘 내에서 당론과 다르다며 반발이 일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표는 “소상공인 지원은 대폭 늘리고, 송 대표께서는 카드 캐시백은 실효성이 떨어지니 없애고 하셨다. 지금 시기는 코로나 방역 기준 상황 때문에 소비진작성(지원은) 방역과 맞아야 하지 않느냐”며 “(지금) 시기를 조정하고 아이디어를 절충해서 갔는데 전국 민 재난지원금 합의가 타이틀로 많이 뜨고 보니 이 부분만 부각돼 설득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코로나 사태에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지원을 늘리고, 방역 상황과

맞지 않는 소비진작성 재난지원금은 신중히 검토한다는 게 당분”이라며 “저희가 주장한 가장 어려운 분들이 피해를 회복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면서 민주당은 민주당 생각대로 경기진작과 부양 효과가 있다면 일정 부분 열어놓고 생각하겠다는 게 합의”라고 밝혔다.

두 대표는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심화됨에 따라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우선이라는 데도 뜻을 모았다.

송 대표는 “소상공인 지원을 3000만 원

까지 늘리고, 직접적인 행정명령 대상이 아닌 업종도 실질적인 피해를 받으면 지원 업종을 확대시키는 논의가 될 것이고 시급히 지원돼야 한다”며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코로나 방역 상황 때문에 시기가 시급한 건 아니고, 조정이 필요하다. 일단 소상공인 지원이 시급히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도 “액수에 대한 논의와 방식에 대한 논의도 중요하지만 언제가 가장 재난지원금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시기인지 논의해야 한다”고 동의했다.

한주홍 기자

한인권위원회(HRNK)가 개최한 온라인 회의에서 중국 내 탈북민 문제를 북한 인권 문제 중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사안으로 거론한 바 있다.

RFA에 따르면 올턴 의원은 “중국 내 탈북 여성의 인신매매는 강제 노동, 강간, 성폭력 등을 포함한 매우 심각한 인권유린”이라며 “중국은 송환 후 탈북민들이 처하는 상황들을 알고 있으면서도 남성, 여성, 아동을 모두 (북한으로) 돌려보내고 있다”고 했다.

한편 보고서가 발표된 20일 ‘북한에 관한 초당적 의원모임’은 북한 인권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문제 개선을 위한 목소리를 영국 내는 물론 국제사회에 활발하게 전달해 왔다고 RFA는 소개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모임은 이날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위원장을 비롯해 이 모임의 의장인 피오나 부르스 하우의원, 데이비드 올턴 상원의원 등 10여 명의 영국 상하원 의원이 참석했다.

회의 후 나온 보도자료에 따르면, 올턴 의원은 “국제사회는 궁지에 몰려 고통받는 북한 주민들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며 “영국 의회는 그들을 대신해 말하고 행동해야 하는 우리의 의무를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RFA는 전했다.

이 회의에 참석한 탈북민 출신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보고서 제작 당시부터 북한의 주요 인권 침해 조사 보고서( Inquiry into Human Rights Violations in North Korea 2014-2020)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7년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 위원회 보고서의 권고안이 발표된 이후로도 북한 인권 상황이 전혀 개선되지 않았으며, 북한 당국에 의한 고문, 비인간적인 대우, 강간 및 성폭력, 성매매, 강제 낙태나 영아 살해, 현대판 노예, 종교나 신념에 의한 박해 등 잔학하고 반인륜적인 행위가 여전히 목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고 한다.

보고서는 영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국제사회가 함께 이러한 참혹한 북한 인권유린 문제 개선을 위한 관여

(engagement)에 나서야 한다고 권고했다

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보고서는 이를 위해 영국 정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내 북한 인권에 대한 새로운 관심을 촉구하고, 관련 회의를 늘리는 한편 다른 국가들과 함께 정기적인 회의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RFA는 덧붙였다.

또, 영국 정부는 한국 정부와 협력해 중국 구금시설 내 탈북민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 정부와 외교적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고 한다.

보도에 따르면 이 모임의 공동의장인 데이비드 올턴 상원의원은 지난 4월 북

한국·세계교회와 종교 자유 위해 기도를 》 7면

‘현대 예배’(Modern Worship) 초기 시대 》 22면